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30
----------	------

발의연월일 : 2024. 9. 10.

발 의 자 : 김주영 · 박해철 · 송옥주
서영석 · 박정현 · 김성희
복기왕 · 김민석 · 김현정
이용우 · 서영교 · 조정식
한정애 · 박균택 · 전현희
의원(15인)

제안이유

현재 공공부문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 인사·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는 그 근거법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마저 종료된 상태임.

공무직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더 나아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는 상설화를 통해 그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구분하고,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하여 분류함(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무직위원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5항).

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직군, 정원, 보수체계 등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근로자

3.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

다. 용역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
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
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무원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력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연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원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원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공무원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공무원근로자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원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근로자 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교육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

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③ 발전협의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원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은 단장과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

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